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 미국 의회에선 입김이 센 의원들 상당수가 바로 FTA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지역 구나, 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의 최대 생산지인 몬테나주의 막스 보커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철의 장막'으로 칭하며 청문회를 추진했던 하원의 레빈 무역소위 위원장도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 주 출신이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한-미 FTA 체결의 화두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여부다.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하지 않으면 서명조차 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미 FTA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주당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협상기간 중 쇠고기를 직접 시식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5월에 있었던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2단계인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분류되면서 미국측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미국의 의도

지난 5월 10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신통상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미 의회의 다수파인 민주당과 부시의 공화당 행정부가 통상 정책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면서 민주당의 요구였던 노동권과 환경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FTA 표준안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노동과 환경규제를 내세우며 한국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신통상정책'에서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제조, 농업,

서비스 시장의 체계적인 장벽 제거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주석을 달아놓았다. 농산물 재협상 요구는 '뼈가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서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농림부는 지난 4월 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문서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농림부 문서에 "미국은 2003, 2006년 광우병 소가 발생했으나 어느 농장에서 발생했는지 밝히지 못한 것처럼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고,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알려졌다.

문서 발송 이후 미국은 백악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장이인 맥스 보커스 의원 등은 크게 반발했다. 그 이유는 4월 2일 협상 타결 직전 노무현 대통령, 부시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통제국가로 등급이 조절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뼈까지 수입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한국의 의견서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성 여부에 불만을 제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어서이다.

광우병 위험을 상존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국제무역사무국은 미국을 수출이 가능하도록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지정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농민단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국제무역사무국이 있는 프랑스로 건너가 시위를 벌였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묻혀있는 그들의 벽을 넘긴 역부족이었다. 결국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전문위원회는 22일 예상대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BSE)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미국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이미 동물성사로 교차오염 문제가 지적된 것처럼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국은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광우병 국가등급체계 자체에 있으며, 이를 수정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만든 미국 등 거대 축산기업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농무부는 마치 OIE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을 통해 “이번 국제적인 검증을 우리 교역국들에게 미국 소와 쇠고기 제품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도록 촉구하는데 활용할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SRM(특정위험물질)인 갈비뼈와 사골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포함해 수입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 역시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가 국제수역사무국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며,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라는 판정을 받은 것은 이 같은 로비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갈비뼈가 든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의 “인간적 실수?(human error)”

미국산 쇠고기 수입여부는 양국이 가장 민감하게 대치하고 있는 핵심사항이다. 지난해 10월30일 미국산 쇠고기의 첫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발생했다.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뒤 양국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처음으로 수입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됐다. 그 이후 지난해 11월24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뼈조각이 발견되면서 다

시 전량 반송됐고, 같은해 12월1일에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뿔조각과 함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됐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지연하기 위해 광우병과 상관없는 뿔조각이 든 쇠고기를 걸고 넘어진다면 불만을 표시했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재경부와 외통부에서도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농림부의 검역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명백한 위반임에도 미국측을 두둔하는 정부의 잦은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가 지난 달 25일에 발생했다. 미국 카길사에서 수입된 쇠고기 15.2t에서는 뼈가 전혀 발라지지 않은 갈비 두 상자가 발견된 것이다. 또 26일 미국 타이슨푸드사에서 수출한 쇠고기 51.2t이 한국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미국 내수용임에도 수출검역증을 붙여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 미국측에 확인을 요청하였고 미국은 답변을 통해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둔갑하는 인간적 실수(human error)라고 해명하였다.

이번 사건은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이후 ‘광우병 위협통제국’ 판정을 받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검역 체계 전반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가공 과정에서 뿔조각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고, 대한민국 수출분만 이물질 검사 등을 거칠 경우 비용이 늘어나 사실상 교역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월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뿔조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측의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광우병 쇠고기 앞에 실험용 쥐인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지난해 한-미 두 나라가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섯차례나 위반해, 정부가 수입 전면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그러나 정부는 소극적인 문구 해석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미국 쪽 주장에 밀려 최종 판단과 결정을 꺼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21조는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모두 다섯차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으므로, 농림부 장관이 결정만 하면 21조 규정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양국이 합의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수입위생조건을 다섯 차례나 미국이 거듭 위반했으므로,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양국 간의 수입위생조건이 반복적으로 위반되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수입위생조건 21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발 물러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작업장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미국 쪽 조사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유보적 자세를 보였다. 또한 해당 조항은 시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이며, 광범위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당장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중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인간적 실수를 옹호했고, “미국 내수용은 먹으면 안되는 고기인지 따져볼 필요성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